

고용보험 취득·상실로 본 피보험자 수 증감 변화

- 본고는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폭 둔화 원인을 피보험자격 취득자와 상실자의 변화를 통해 살펴봄.
 - 이를 통해 고용 변화를 경기 변화와 더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음.
- 분석은 고용행정통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, 취득자, 상실자 수 자료를 활용함.¹⁾
 - 피보험자 수는 해당 월 말일 집계 시점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전체 피보험자 수를 의미함.
 - 취득자 수는 집계 시점까지 피보험자격을 신규 혹은 재취득한 인원을 의미함.
 - 상실자 수는 집계 시점까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의미함.
-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수 증가폭의 변화는 취득자와 상실자 수의 변화로 구분해 볼 수 있음.
 - 월별 피보험자 수는 해당 월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에서 상실자 수를 뺀 값에 전월 피보험자 수를 더한 값이고²⁾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수 증감은 취득자 수 증감에서 상실자 수 증감을 뺀 값에 전월의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수 증감을 더한 값임.³⁾
 - 즉,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수 증가폭의 월별 변화는 취득자 수 증감에서 상실자 수 증감을 뺀 값임.
- 피보험자 수 증가폭은 2022년부터 둔화되고 있음.

- 1) 고용행정통계 피보험자 자료는 상용·임시직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나 2024년 11월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99.7%는 상용·임시직 임금근로자임.
- 2) 피보험자 수 = 취득자 수 - 상실자 수 + (전월)피보험자 수. 다만, 실제 각월 피보험자 수와 취득·상실자로 계산된 피보험자 수는 분석기간(2020년 1월~2024년 11월) 동안 평균 0.07% 정도의 차이가 있음. 이는 취득자 수와 상실자 수가 독립적으로 집계되고 있어 동일인이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을 할 경우 취득자와 상실자에는 각각 1명으로 집계되기 때문임. 이 경우 취득자 - 상실자는 0명이지만 최종 상태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 수는 늘거나(최종 취득자) 줄어듦(최종 상실자). 이로 발생하는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실제 각월 피보험자 수와 취득·상실자로 계산된 피보험자 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하였음.
- 3)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수 증감 = 전년동월대비 취득자 수 증감 - 전년동월대비 상실자 수 증감 + (전월)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수 증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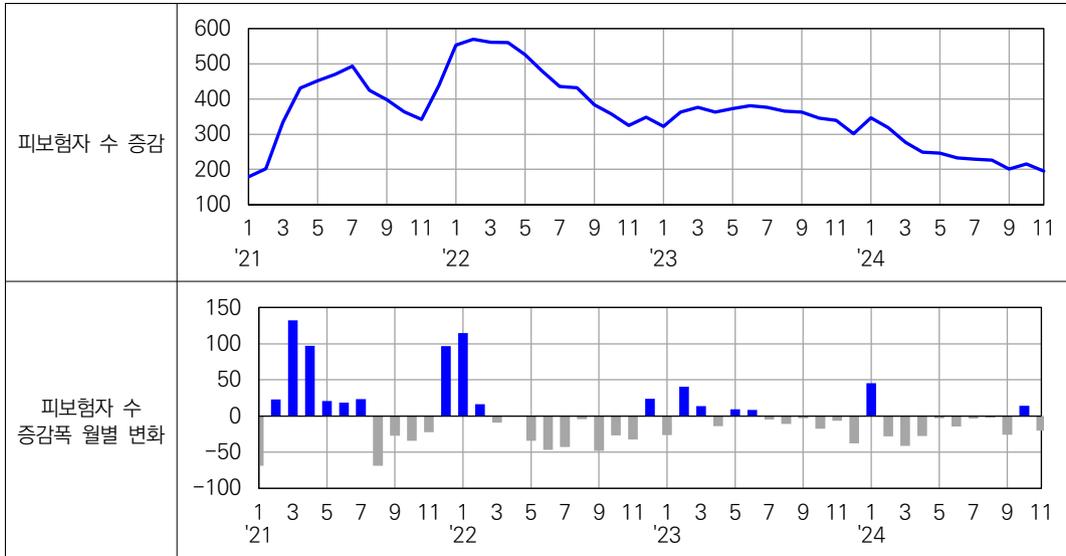
- 피보험자 수는 2021년부터 2022년 2월 57만 명까지 증가폭이 확대된 후 점차 증가폭이 축소됨.
-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증가했고,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고용보험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된 영향을 받았음.⁴⁾
- 2023년 상반기에는 피보험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어 증가폭의 둔화 추세가 주춤했음.
- 상반기 증가폭 확대는 2023년부터 E-9(비전문 취업) 및 H-2(방문 취업)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영향임.
- 피보험자 수 증가폭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축소되는 추세임.

○ 2022년과 2024년 피보험자 수 증가폭의 축소는 양상이 다름.

- 2022년 피보험자 수 증가폭의 둔화는 하반기 들어 상실자 수는 증가를 유지했지만 취득자 수는 감소로 전환된 데 기인함.
-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점차 줄고 유출은 늘어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한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.
- 반면, 2024년 피보험자 수 증가폭 둔화는 취득자 수 감소폭이 상실자 수 감소폭보다 더 큰 것인 원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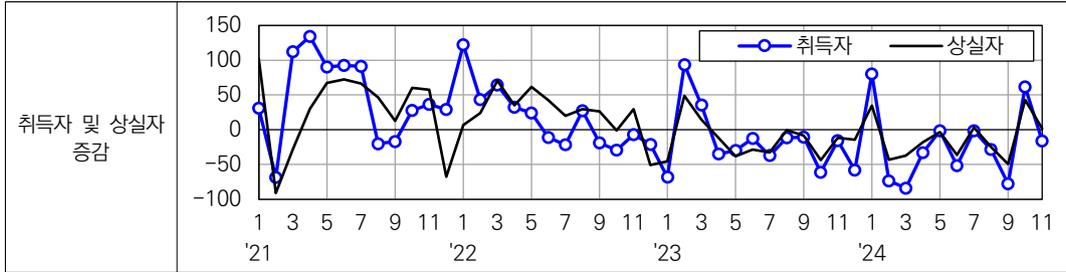
[그림 1]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 및 증감폭 변화와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자 수 증감 추이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4) 2021년 7월, 2022년 1월, 2022년 7월에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이 확대됨.

[그림 1]의 계속



주: 피보험자 수 증감폭 월별 변화는 예를 들면 전년동월대비 2024년 11월 피보험자 수 증감 - 전년동월대비 2024년 10월 피보험자 수 증감을 의미함.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(2024), 「고용행정통계 EIS」.

- 2024년 피보험자 노동시장은 취득과 상실이 동반 감소하여 경기 하강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○ 2024년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감소는 청년층 신규취득자가 크게 감소한 영향임.

-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2023년에는 재취득자에서 주로 감소했다면 2024년에는 신규취득자와 재취득자에서 동시에 감소했음.
- 신규취득자는 2021~2023년까지는 전체 취득자의 변화에서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음. 반면 2024년에는 29세 이하 청년층 신규취득자 수가 인구감소 영향과 맞물려 전년보다 7.9만 명 감소함.
- 2023년 신규취득자가 크게 증가했던 30대는 2024년에는 기저의 영향까지 더해져 4.2만 명 감소함.
- 2024년 고용보험자격 재취득자는 2023년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됨. 주로 청년층에서 재취득자 감소폭이 축소됨.

〈표 1〉 연령별 피보험자격 신규취득자 및 재취득자 증감

(단위: 천 명, 전년대비)

	신규취득자						재취득자					
	전체	29세 이하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	전체	29세 이하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2021	-3	30	13	-8	-17	-21	541	167	92	57	83	141
2022	-14	-1	4	-5	-10	-1	217	8	21	18	44	128
2023	13	-16	32	1	-6	1	-224	-148	-50	-75	-28	77
2024	-139	-79	-42	-12	-11	6	-87	-72	-27	-75	-14	101

주: 1) 각 연도별 누적치의 증감임. 2024년은 2024년 1~11월 누적치와 2023년 1~11월 누적치의 차이임.

2) 신규취득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취득자임. 재취득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취득자임.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(2024), 「고용행정통계 EIS」.

-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변화는 주로 자발적 상실자에서 나타나고 2024년에는 이직을 계획하는 피보험자가 줄었음.
 - 자발적 상실자는 2021~2022년에 증가했고 비자발적 상실자는 감소했음. 해당 기간에 피보험자의 이직이 활발했음을 의미함.
 - 자발적 상실자는 2023~2024년에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상실자는 2023년 증가했고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함.
 - 해당 기간 이직자가 감소하고 비자발적 상실자의 감소는 2022년 이후 멈췄다는 점에서 경기 하강의 조짐을 볼 수 있음.

〈표 2〉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별 상실자 수 및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대비)

	상실자 수				상실자 수 증감			
	자발적	비자발적	계약만료	기타	자발적	비자발적	계약만료	기타
2021	4,235	1,005	1,752	215	410	-174	86	6
2022	4,632	947	1,665	256	397	-57	-87	41
2023	4,517 (4,185)	987 (919)	1,574 (1,366)	251 (235)	-116	40	-90	-4
2024	4,062	910	1,379	223	-123	-8	13	-12

주 : 1) 각 연도별 누적치의 증감임. 2024년은 1~11월 누적치임.

2) 자발적 상실자는 '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' 사유를 포함함. 비자발적 상실자는 '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 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', '폐업, 도산' 및 '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' 사유를 포함함. 기타는 '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', '정년', '고용보험 비적용, 이종고용', 및 '분류 불능' 사유를 포함함.

3) () 안은 2023년 1~11월 누적치임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(2024), 「고용행정통계 EIS」.

- 본고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폭 둔화를 취득자와 상실자 수의 변화로 분리하여 살펴봄.
 - 2024년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자와 상실자가 모두 감소했는데 피보험자 수 증가폭의 둔화는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음.
 - 2024년 취득자 수 감소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는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던 29세 이하 청년층 신규취득자가 크게 감소한 것임.
 - 상실자 수의 감소는 자발적 상실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음. **KLI**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